

# 북한의 경제 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 1.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경제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sup>1)</sup>의 제도화를 둘러싼 1960년대 북한의 선택

북한에서 경제 발전론은 사실상 1950년대의 논쟁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1956년의 8월종파사건이라는 권력투쟁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재 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장대체형의 경제구조를 강제로 조성하는 소비에트식 강행성장(forced growth)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던

---

1) 코르나이는 경제조정기제를 관료적 조정, 시장 조정, 자치적 조정, 윤리적 조정, 가족 조정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경제체제(system)에는 이들이 공존하는데,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관료적 조정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한다. Joha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2), pp. 91~109.

코르나이는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의 주도성 여부로 개혁사회주의의 징표를 구분하였다.

것이다. 강제저축에 의한 급격한 자본축적, 집중적인 중공업 투자, 농·공업에 대한 국가소유 부문과 통제의 확대, 시장의 대체와 계획종속, 대외 관계의 자급자족화(autarky), 소비에 대한 극단적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sup>2)</sup> 강행성장 모델의 목적론적(teleological) 지향은 고스란히 북한 체제의 원형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재 선호가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에 대한 극단적 통제’ 정책은 경제가 침체되거나 발전의 속도가 늦어지면, 빵을 원하는 (노동자) 대중과 이들을 대변하는 일부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는 불만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불균형 발전론과 맥이 닿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균형에 기반하고 있는 강행성장체제가 지속적인 동원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항상적으로 관리하여 자생적인 불만들이 조직적인 대안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점에서 이들 체제들은 자신의 불균형 발전론을 끊임없이 재해석함으로써 발전을 향한 희망과 청사진을 대중들에게 제시하여 동원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원배분상의 우선순위나 경제조정기제에 대한 변화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농업이나 소비재 산업으로의 투자 확대가 대체적인 경향이었지만, 후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통제의 심화(perfection of control),<sup>3)</sup> 즉 관료적 조정의 심화로 나아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관료적 조

---

2) Christopher Davis & Wojciech Charemza, "Introduction to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model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Christopher Davis & Wojciech Charemza(ed.),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London : Chapman and Hall, 1989), p. 6.

3) 코르나이의 이 개념은 분권화 개혁의 역편향, 즉 집중화나 관료적 조정의 심화를 의미한다.

정을 대신해 시장조정기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강행성장의 소비에트 발전론은 자원배분상의 불균형과 경제조정상의 관료적 조정기제에 의거하고 있었다. 양자는 추격발전과 자립의 동원을 위한 동전의 양면으로 사료되었다. 사회주의권의 1960년대는 바로 이같은 발전론의 양자간 결합에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과연 불균형의 자원배분, 즉 자본재 우선의 중공업 체제가 시장조정기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때의 시장조정기제는 소유제의 사유화를 동반하는 것인가, 또는 공유제 하에서 가격신호만으로 기능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재 산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균형적 자원배분이 선행하고 이에 맞추어 시장조정기제가 심화되어야 하는가 또는 시장조정기제는 부분적으로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관료적 조정기제에 순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물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깊게 진행되었지만, 추격발전이라는 지상과제와 냉전적 상황 때문에 국방공업과 자본재 위주의 자본집약적인 성장에 치중하고 있던 이들 체제들이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대해 제출할 수 있었던 대안은 특히 경제조정기제에 대한 변화의 추구였다. 어쨌든 1960년대의 속도 - 균형 논쟁이라는 것도 이처럼 자본재 우위 노선과 관료적 조정기제의 결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면서 나타난 이러저러한 이견들의 조합일 따름이었다.<sup>4)</sup>

---

“반대되는 심화 경향(the opposing perfection trend)이 나타난다. 대신해서 집중화를 증대시키는 제안이 그것이다. 관료주의적 망(bureaucratic mesh)은 해소해져서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한다. 몇몇 고안된 집합적 지표(designated aggregate indicator)나 다른 지표를 벗어난다면 보다 더 상세한 지표들이 요구될 것이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 406.

4) 당시의 다양한 논의들은 스탈린식, 즉 강행성장체제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이견들이

물론 북한은 이같은 논의 일반을 수정주의로 간주하고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이로부터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 내부에도 역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경제조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했고 그것은 간헐적이거나 지도부의 노선에 대한 반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북한의 지도부는 1962년 12월 경제 - 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불균형적 자원배분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 사실화하였다.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국방공업에 둠으로써 이론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균형성장에 대한 옹호는 사실상 포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이로부터 발생할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위기국면을 경제조정기계의 강화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즉 관료적 조정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화하여 효과적인 ‘동원’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한 것이었다.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를 이어 확립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바로 그것이었다.<sup>5)</sup>

중요한 것은 불균형의 심화와 관료적 조정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제출되고 있던 상황을 보여 줄 따름이었다. 그것들은 대체로 빠른 성장을 위주로 하는 기존 노선에 대한 수정이라는 공통성을 지닐 따름이었다. 따라서 소위 성장 위주의 기존 노선, 즉 속도를 반대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균형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기존 노선에 대한 이견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다.

- 5) 물론 경제 - 국방 병진 노선과 4대 군사화 방침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공표되었고 대안체계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이보다 1년 앞서 1961년 12월에 창출되었다. 그러나 경제 - 국방 병진 노선이 중·소 갈등과 흐루시초프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자립노선’의 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1961년에 이미 북한은 소련과의 갈등으로부터 연유하는 경제상황의 악화를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안체계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라는 경제조정기계의 정비와 제도화 조치 역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1961년 12월 1일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노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이태섭의 주장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298쪽.

북한의 선택은 앞서 본 1960년대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 일반의 경향에 대해 전혀 다른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소위 리베르만 노선으로 알려진 개혁론은 자원배분에서 균형의 복권과 조정기제에서 시장조정의 도입과 강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회주의권 일반의 개혁 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이를 수정주의로 규정한 체제 이데올로그들 간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소위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전개된 속도 - 균형 논쟁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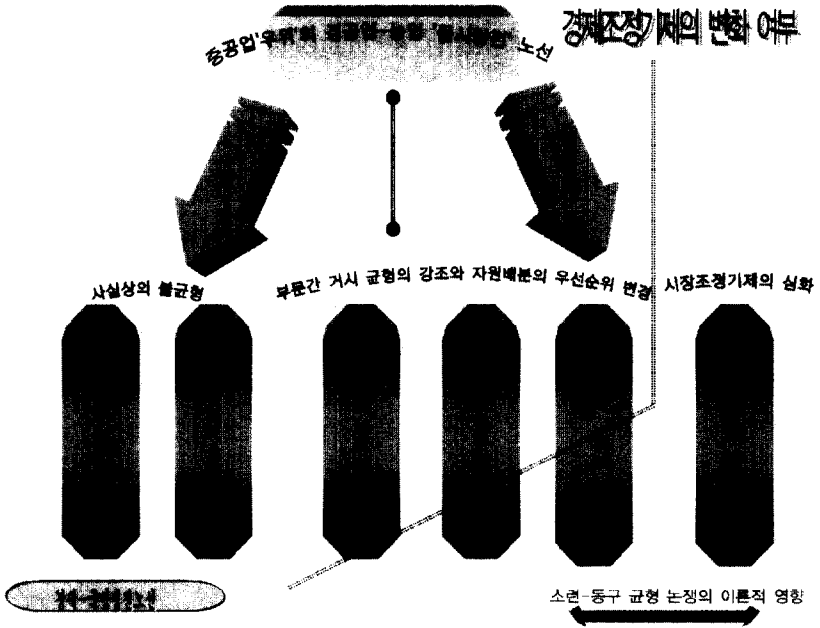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수습함으로써 북한 체제는 명실공히 ‘수령제 사회주의’로 안착하였다. 북한의 지도부는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경제 - 국방 병진 노선의 계속 강조를 재확인하고 1967년 5월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반대파를 제거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소위 1967년의 갑산파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의 이론화 작업은 1969년 김일성의 ‘높은 속도론’과 ‘가치법칙에 관한 형태적 이용’ 테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다.

이하 2장에서는 자원배분의 우선성과 경제조정기제라는 잣대로 북한 발전전략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 3장에서는 196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특히 조정기제를 둘러싼 논의의 재연 과정과 이를 통해 확립된 북한 경제이론의 재론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것은 곧 현재 북한의 발전론이 서 있는 이론적 기반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2. 북한의 경제 발전론 재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발전론의 다의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정책

<그림 1>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화와 '중공업 우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의 다양한 해석



의 전개과정은 <그림 1>에 집약된다. <그림 1>은 1950년대에 확립된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이 북한 내에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또한 이를 둘러싼 관료들간의 논쟁과 갈등이 경제 운용의 내적 과정으로 중요하게 자리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 발전 이론에서 '동시 발전'은 때에 따라서는 중공업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경공업과 농업만의 동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양 산업과 중공업과의 동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는 곧 '동

시 발전'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발전방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 북한 체제의 50년사는 이같은 변화들을 보여 주고 있다.<sup>6)</sup>

## 1) 북한 사회주의 경제 발전론 :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의 다양한 외연과 내포

사회주의 경제학의 발전론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the law of planned proportional development)'<sup>7)</sup>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8)</sup> 잉여 가치법칙과 가치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의 자연발생성과 불균형성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획성과 균형성이 고유한 발전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획성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생산과 소비의 요구에 맞게 분배하거나 교환하며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의 전 과정을 목적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실현하는 특성”이고, 균형성은 “생산의 요소들, 조건들의 기능에서 그들 사이에 합리적인 연계가 보장되는” 경제 발전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때 균형적 발전이 의도하는 ‘균형’의 실제 내용은 ‘확대재생산 균형’의 비례성(proportionality), 즉 생산수단 생산의 우위, 즉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론’을 의미하는 것일

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변동추세 분석은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63~64쪽 참조.

7)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293~404쪽 참조.

8)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제33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7), 27쪽(동국대 홈페이지 자료 쪽수임); 박순성,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체제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31호(1999), 196~199쪽.

따름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학은 이같은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이 소위 ‘경제건설의 기본노선’<sup>9)</sup>인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에 의해서 비로소 사회주의적 성격의 법칙이 된다고 주장한다.<sup>10)</sup>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는 조건<sup>11)</sup>에서,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의 유연한

9)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은 모든 사회의 재생산에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의 합법칙성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형성되고 작용할 수 있는 합법칙성이다. 그것도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기본 생산 부문의 발전 방식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합법칙성이다.” 양호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 실현의 특성”, 『경제연구』, 2호(1991), 7쪽.

10) 이에 대해서는 한득보의 다음과 같은 설명 참조.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호상관계는 이 도식(저자주 -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이라는 확대재생산 도식)과 련관은 되면서도 그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합법칙성을 이룬다. 그것은 확대재생산 도식은 사회생산물의 실현도식, 특히 생산수단 생산의 보다 빠른 생산의 도식이지만,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합법칙성은 그의 선후차관계, 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규제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두 부문에서 새로 창조된 가치가 소비재 부문(Ⅱ부문)의 생산물 가치보다 큰 조건에서도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발전의 선후차관계는 여러 가지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생산수단 생산 부문(Ⅰ부문의 생산물이 두 부문의 보상 фонд보다 크거나 Ⅰ부문의 새로 창조된 가치가 Ⅱ부문의 보상 фонд보다 큰 조건에서도 기본 생산 부문의 발전 속도와 균형은 다른 유형으로 규제될 수 있다.”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2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442쪽.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합법칙성은 모든 사회적 재생산에 일반적인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이 사회주의적 성격의 법칙으로 작용하게 하는 근본 담보로 된다.” 위의 책, 469쪽.

11) 축적의 축소가 곧 생산수단 생산속도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 법칙이 곧 축적의 강화라는 관념에 대한 변화이기도 한 것이다.

“일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확대재생산은 (생산수단 생산의) Ⅰ 부문이 (소비재 생산의) Ⅱ 부분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본 - 산출 비율 감소는 만약 Ⅰ 부문 생산이 Ⅱ 부분보다 더 빨리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소득의 높은 성장률을 보장한다.”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0), 배연수 옮김, 『사회주의경제학』(대구 : 영남대학교출판부,



적용은 북한 경제의 자원배분상의 ‘균형화’ 과정을 특징지움으로써 북한 식 경제 발전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득보는 그의 글에서 ‘중공업 우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의 발전론적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sup>12)</sup>

먼저 ‘중공업 우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은 생산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이하 각각 I, II 부문) 간의 성장속도가 가장 근접한 상태일 때, 전반적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해명하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즉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에 의해 소비재 생산에 들어가는 중공업 생산물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해명됨으로써, 소비재 생산 부문의 발전을 생산수단 생산 부문의 발전에 근접하게 하는 조건에서의 생산수단의 우선적 성장이 해명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공업 우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에 의해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생산수단의 우선적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 성장이 근로자들의 소비와

---

1986), 62쪽.

이에 대한 증명은 다음을 참조.

“I 부문의 생산물을  $PI$ , II 부문의 생산물을  $P_{II}$ , 물질적 지출의 보상 몫을  $C$ , 축적 기준을  $N$ 이라고 할 때, I 부문의 생산물  $PI = C + N$ 이다... 따라서 양변을 총생산물  $P$ 로 나눈  $PI/P = C/P + N/P$ 의 공식에서 생산적 축적의 몫  $N/P$ 를 고정시켰을 때,  $PI/P$ 의 장성은  $C/P$ 의 장성과 같다. 그런데 사회 총생산물은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진 만큼( $P=PI + P_{II}$ ) 사회 총생산물에서 I부문의 장성은 곧 부문에 비한 장성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축적 기준이 불변인 조건에서도 보상 폰드의 증대로 II부문에 비한 I부문의 우선적 장성은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때문에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축적 증대와 연관됨이 없이도 필수적인 것으로 되며 생산적 축적의 기준을 낮추는 경우에도 기술적 진보에 기초한 재생산에서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된다. 이로부터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적 축적 기준을 낮추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464~465쪽.

12) 위의 책, 469~472쪽.

인연이 없이 자칫 자본축적의 법칙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막고, 구체화된 소비재 생산 부문인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생산을 보장하는 데로 방향지음으로써 주민 소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주의적 재생산법칙으로 작용하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난날 공업의 범위 안에서만 I 부문과 II 부문 사이의 속도와 균형이 설정되던 한계를 극복하고,<sup>13)</sup>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균형이 농업과 공업 전체를 포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전사회적인 것으로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이 이같이 정립되기까지는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른 두 번의 의미변화 과정이라는 험로를 넘어야만 했다.

먼저 살펴 볼 것은 중공업의 기초를 축성하며 자체의 경공업과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 특히 1950년대의 함의였다. ‘중공업 우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은 그 시초 시기에는 원시적 축적과 강행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전형적인 불균형 성장론이었다.

북한의 불균형 성장방식은 철강과 기계공업 부문의 빠른 수입 대체 산업화와 강력한 국가 조직력을 통한 내부 예비의 추출방식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즉 ‘두 다리로 걷기식’<sup>14)</sup>의 이중상태<sup>15)</sup>의 활용을 통한 지방

---

13) 이 때에는 다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에 의하여 이론이 보충되고 수정되어야 했다.

14) 이는 중국 대약진 시기의 발전전략으로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근대공업과 전통공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대약진 시기 전통적 부문은 소규모의 기업들이 이 부문에 필요한 모든 소비, 생산 및 투자를 제공해야 하는 자급자족체제로(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제적 자급자족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도자들은 대약진의 전성기에 뒷마당에 강철 용광로를 만들고 소규모 화학비료공장과 전력 공장을 세우라고 권장했다. 그리하여 전통적 부문은 근대적 부문의 생산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부

공업의 발전 방침과 농업집단화와 상업망의 신속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국가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근대적 자본축적 부문에 돌리고, 농업과 경공업의 경우 값싼 소규모 자본설비의 추가나 기술교육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과 판매망의 확충을 통해 자체적 발전의 동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 생산 부문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정한 높이에 이른 시기에 와서는, 노동수단의 성장속도가 앞서면서도 원료, 자재의 빠른 공급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sup>16)</sup> 여기서 자립적 민족경제론은 실상 원료, 자재 등의 노동 대상 생산 부문, 즉 채취공업 혹은 전력공업 등의 선행 부문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의 토대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 이 단계에 와서 기존의 시초축적 논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자원배분상 생산수단과 소비재 부문 간의 우선순위 문제를 넘어, 수입 대체 산업화가 가지는 폐해를 인정하고 국제적 협조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방위적인 자립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원료, 자원 등의 노동 대상의 생산 부문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세계체제 내에서 연계 - 단절의

---

문은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못한 채 식량과 원자재를 근대적 부문에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 부문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며 노동의 대규모 동원과 이에 따른 관개, 개간 및 치수 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의 활용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어 이 부문의 성장 또한 가속화되었다. 이 시대의 발전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루이스 모델이다. Alexander Eckstein, 김기훈 옮김, “개발전략과 경제정책”, 이병주 편, 『현대중국론』(서울: 청람문화사, 1984), 205~208쪽. 루이스 모델의 의미와 북한에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273~275쪽 참조.

15) Albert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New Haven: Yale Univ. Press, 1958), 김만제 옮김, 『현대경제경영대전집 25 - 경제개발의 전략』(서울: 서음출판사, 1981), 444~452쪽.

16) 양호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 실현의 특성”, 8~9쪽.

문제와 함께, 나아가 동원의 효과성을 둘러싸고 경제조정기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3중으로 결합된 고급한 논의였다. 즉, 그 같은 논의의 한 축은 앞선 단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가 자금의 방향을 축적보다는 소비에 돌릴 것인가, 즉 거시 균형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립경제’를 위해 연료와 원료 생산 그리고 국방공업의 자급체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따라서 사실상의 불균형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자원배분상의 우선순위 변화를 둘러싼 대결이었다.

물론 다른 한 축은 경제조정기제에서의 주도성 변화, 즉 관료적 조정기제를 시장조정기제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1967년을 전후해서 벌어진 북한 내의 권력투쟁은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의 한 단계 높은 발전단계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갈등이 또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sup>17)</sup> 결과는 ‘자립적 민족경제’와 ‘높은 속도’의 정식화였고, 균형은 동원의 ‘적극화’를 통해 충족될 ‘주체적’ 요소로 남겨질 따름이었다. 1990년대에 와서 한득보의 정치한 이론화가 북한의 발전론을 균형 성장론으로 재이론화했지만, 사실상 그 이전의 논의는 자립과 자위에 종속되는 형식상의 균형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 2) 북한의 균형론과 경제조정기제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라는 특성상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균형’을 통해 체제 정당성을 검증받

1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428~436쪽.

지 않을 수 없다.<sup>18)</sup> 북한 역시 계획기간 사이에 조정기, 완충기를 반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균형을 강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 왔다.

문제는 경제의 다양한 부문과 범주 간에 어떤 균형을 설정하고 그같은 균형화의 조정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한편으로는 부문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경제’의 후생, 즉 배분을 통한 장기적 동기부여와 당면한 경제성장률 간의 선택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자가 관료적 조정을 주로 하는 부문간 균형(balance)의 문제였다면 후자는 역시 시장 (최적)균형(optimal equilibrium), 즉 분권화와 시장조정기제의 심화 문제였던 것이다. 직접 통제와 관료적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균형론이 전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김일성은 1964년의 논문에서 이미 부문간 균형이나 소비와 축적 간의 균형 등의 거시 균형뿐만 아니라 부문 내부의 세부 균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sup>19)</sup> 이는 곧 부문간 균형, 즉 거시균형뿐 아니라 최적 균형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것인바,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정책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균형을 종합적 균형과 세부 균형으로 나눈다. 전자는 “축적과 소비 사이,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사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사이의 균형을 비롯하여 중요 균형들과 같은 종합적 지표들의 호상 관계와 발전 속도를 옳게 설정하고 조절하여 정확히 맞물리게 한 균형으로

---

18)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민경제 발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계획적 발전이란 곧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의미하며 경제 발전의 균형성을 떠나서는 계획경제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2차 7개년 계획 작성 방향에 대하여”(1974), 『김일성 저작집』, 제2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321쪽.

19)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91~194쪽.

서 이것은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통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sup>20)</sup>이고, 후자, 즉 세부 균형은 “인민경제 매개 부문, 단위,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의 균형을 정확히 맞물려 놓은 균형으로서 전반적 경제 균형들을 사소한 불균형성도 없이 완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sup>21)</sup>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서 균형은 부문간 균형뿐만 아니라 부문 내부 균형마저도 시장, 즉 최적 균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현물적으로 통제하는 관료적 조정의 ‘세부화’ 기제에 의해 도달되는 것으로 되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공급자 측면에서의 균형이었다. 따라서 수요자 측면, 즉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는 시장기제를 통해 대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는 현물적 균형화 기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문제라는 고리였다. 주문제(공급제의 전 단계로 규정됨)는 정확한 수요의 파악과 등록, 분배의 통제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이다.<sup>22)</sup>

20) 주형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2호(1994), 18쪽.

21) 위의 글, 18쪽.

22) 주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조할 것.

“소비품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사이의 정확한 균형은 사용가치와 용도가 서로 다른 개별적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다시 말하여 주민들의 수요구조와 소비품의 생산 및 공급 구조 간의 일치가 보장될 때 세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하에서 소비품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품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품종별 소비품의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주민의 수요에 일치시켜야 한다.” 리종만, “사회주의 상업에서의 주문제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호(1990), 44쪽.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주민들의 화폐소득의 기본 부분이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기 때문에 국가가 근로자들의 구매력 수준을 타산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 장성에도 일정한 합법칙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는 주민들의 수요구조의 변

이같은 북한 체제의 균형론은 철저하게 중앙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균형으로서 이론상으로는 그 어떤 시장조정기제도 허용하지 않는 극단의 현물적 균형론이었다.

철판, 강재 같은 폰드 물자 보장은 계획에 예견하지마는 나사못이나 발브, 베어링 같은 비폰드 물자의 보장은 예견하지 않습니다 ... 국가계획위원회 일부 일꾼들은 비폰드 물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계획화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또 어떤 동무들은 세부 계획화를 하려면 계획지표가 많어 좋이나 된다고 하면서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 지표가 많다고 하여 몰려설 수는 없습니다 ... 우리는 계획지표가 많 좋이 아니라 몇 만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 계획화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 지표가 많아서 하루이틀에 못하면 한두 달이나 한 해가 걸려서라도 세워야 하며 사람이 적어서 하기 힘들면 계획일꾼을 늘여서라도 세부계획화를 하여야 하겠습니까.<sup>23)</sup>

1965년 9월 김일성의 이 연설을 통해, 1964년 3월 확립된 바 있던 일원화 계획체계는 ‘계획의 세부화 방침’과 결합되었다. 이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는 국가적 사안으로 승격되어 그 어떤 출혈과 인력 손실이 있어도 집행되어야 할 전일적인 ‘관료적 조정기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의 세부화 조치가 단순히 심화되

---

동방향에 대해서도 예견할 수 있다... 개별적인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품류통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상업에서 주문제를 실시하게 된다. 주문제는 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주문의 방법으로 장악하고 주문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는 사회주의적 상품공급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문제의 실시는 상품의 확보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맞물리는 합리적이고 우월한 방도이다.” 김원국, “사회주의 상업기업소 독립채산제의 특성”, 『경제연구』, 1호(1991), 33쪽.

- 23)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 208~210쪽. 1964년 3월 김일성은 일원화 계획체계를 수립하고 그것을 강화하여 1965년 9월에 와서 비로소 계획의 세부화 조치를 결합시킨다.

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일 따름이었는데 하는 점이다. 북한의 이같은 역편향은 사실상 소련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장조정기제의 심화’, 즉 시장 (최적)균형론의 도입이라는 ‘수정주의’ 문제를 대체할 방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북한의 지도부는 시장 조정기제의 강화를 수정주의로 간주하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라는 극단적 현물적 계획화와 현물경제 운동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개량주의와 기회주의’ 바람을 일소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날 일부 수정주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종합적인 균형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 의하여 조절되지만 세부적인 균형은 가치법칙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하였다. 세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종합적인 균형도 제대로 맞출 수 없고 가치법칙이 세부적인 균형을 조절하며 나아가서 종합적인 균형까지도 조절하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가치법칙을 세부적인 균형조절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조절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내세우고 있다.<sup>24)</sup>

1996년에 쓰인 이 글은 당시의 북한 체제가 계획의 세부화 조처를 채택한 동기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즉 가치법칙에 의해 조절되는 균형, 따라서 시장조정기제에 의한 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곧 경제전반에 대한 시장기제의 허용, 곧 사회주의의 계획체제에 대한 무질서의 침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논리야말로 오래된 북한 체제의 세부화 균형론의 현물경제 지향성과 관료적 조정기제라는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균형론이 가치법칙을 종속적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24) 박경옥, “리윤본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호(1996), 52쪽.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적극적’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같은 현물적 세 부하 균형과 정치적 자각에 의한 동원이 가장 사회주의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시장조정기제의 강화라는, 소위 사회주의 개혁 논의 일반에 대해 반대하고 관료적 조정기제를 보다 완전화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인민대중’을 믿고 이들의 노력동원을 최대한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계획화를 보다 완벽히 진행할 경우, 경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른바 속도와 균형의 동시 유지라는 두 토끼 모두를 잡고자 한 개념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창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립된 ‘높은 속도 - 적극적 균형’론이었다.<sup>25)</sup>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25) 1969년,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속도는 한해에 4~5% 아니면 6~7%를 넘지 못한다는 이론을 반박한다. “개건기에 비해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장성의 예비가 적어져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이 이론에 대해, 김일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잉생산 공황으로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 노동이 낭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지 못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생산 장성의 가능성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 운영 수준을 높여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라의 경제를 더 잘 조직화하므로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박한다.

또한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의 빠른 발전은 노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더욱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높은 속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규모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없다는 이론은 맑스-레닌주의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나 민주주의적 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어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일성은 우경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했다.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1968년 4월 당중앙위원회 과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균형을 이같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제 부문간의 균형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 그 격차를 ‘근로인민대중’의 조직적 열성과 창발성으로 해소하는 인센티브의 정치화와 경제에 대한 직접 관리의 시도였던 것이었다. 사실 부문간의 균형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발양될 무진장한 노동 예비와 가능성을 타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이야말로 ‘높은 속도’를 발양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었다.<sup>26)</sup>

그들이 의미하는 ‘높은 속도’는 그러나 ‘비상히 높은 속도’이자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높은 속도’<sup>27)</sup>라는 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균형은 조직과 정치를 통한 항구적인 동원, 결과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피로도(fatigue)’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정치적 수사는 그 대가로 무한한 노력동원체제로부터의 일탈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자아내게 된다. 특히 ‘대외적으로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속도를 보장할 요소는 거의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노력동원의 한계와 피로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같은 ‘적극적’ 균형은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속도 - 균형’ 논의는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배분(distribution)의 효율과 발전의 문제, 즉 동기부여(incen-tive)와 최적균형의 문제제기를 자체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

학교육부를 통한 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1969),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495 ~ 504쪽.

- 26) 김원삼과 한득보는 ‘높은 속도’가 가능한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산의 계획성과 균형성, 둘째,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에 의해 힘있게 추동되는 기술의 빠른 발전, 셋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 등이다.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의 몇 가지 이론문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221 ~ 224쪽.
- 27) 위의 책, 218 ~ 220쪽.

### 3. 1964~1969년, '관료적 조정기제' 전일화의 갈등과 한계

#### 1) 갑산파 사건과 '속도-균형론'의 정립

북한에서 1960년대 중·후반은 중소 논쟁의 와중에서 천리마의 기세가 꺾이고, 대외적으로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높은 속도'는 밀려오는 '피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급기야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미달, 3년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균형화 방안들이 1960년대 후반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논의의 씨앗이 되었고 그것은 북한 체제의 내부 균열을 조장하고 있었다. 북한의 지도부는 다시 한번 발전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앞서 본 '높은 속도-적극적 균형'론이 정립된 것이다.

이 시기 경제 발전 논쟁과 관련해서 김정일의 연설은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속도-균형' 간 상호 중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소위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라는 문제이다. 결론은 물론 속도가 목적이고 균형은 그 수단이라는 것이다.<sup>28)</sup> 이것은 당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

28) “지금 일부 사회주의 나라 경제학자들 속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균형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과의 호상 관계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중시하고 기본으로 삼아야 할 측면은 속도입니다 … 경제의 균형은 경제 발전의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속도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1967. 6. 13),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27쪽.

규모와 속도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sup>29)</sup>

둘째로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주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김정일에 따르면 그것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 즉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라는 것이다.<sup>30)</sup>

셋째로는, 파도식, 말안장식 발전, 즉 불균형 성장론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일시적인 균형과 항구적인 불균형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서 북한 지도부는 모택동과는 달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균형이라는 대의를 수용함으로써, 균형 성장론으로서의 사회주의 발전론을 버릴 수 없음을 공식화한다.<sup>31)</sup>

이상의 논의는 북한에서 ‘높은 속도 - 적극적 균형’이 정립되는 역사적 시기의 논쟁 지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 쟁점이고 보다 현실적인 당내 갈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시기 북한 체제 동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일지도체제로

---

29)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pp. 68 ~ 69.

30)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1967. 6. 13), 228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입니다 ... 그러므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데서 설비나 원료, 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며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보다 생산자 대중의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먼저 타산하여야 합니다.”

31) 이같은 이론적 지향과 현실적 불균형의 끊임없는 대립이 사실상 북한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균형을 둘러싼 진동을 거듭하게 하는 원인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경제가 파도식으로 말안장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경제는 일시적인 균형과 항구적인 불균형에 의하여 한때는 장성하고 한때는 퇴보하는 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리론입니다 ...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고 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의 불균형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위의 글, 228 ~ 229쪽.

서의 수령제의 확립과 갑산과의 숙청이다. 갑산과 숙청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의 연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sup>32)</sup> 본 연구는 이에 못지 않게 경제 발전 논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본다.<sup>33)</sup> 그것은 곧 발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시장조정기제, 즉 시장 균형의 도입이라는 대안의 제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 잠입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들고 나온 ‘리벨만 리론’을 넘겨다보면서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 자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증산에비가 점점 적어진다”느니 “생산은 사회주의적으로 하고 관리는 자본주의적으로 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류포시키면서 생산 장성 속도를 늦추려 하였으며 심지어 ‘가치법칙적용연구그룹’을 조직하여 가지고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기업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려고까지 시도하였다 … 당 안에 잠입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은 노동자들이 결의해 나선 생산계획 수자까지 줄이려 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는 데 제동을 걸었다. 수정주의 사상에 물젖은 어떤 자는 천리마로 달려 나가자고 하는 검덕광산에 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힘들게 많이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알맞춤하게 하라고 하면서 당에서 하라고 한 것보다 광석생산계획을 제멋대로 절반으로 낮추어 놓았다.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검덕광산뿐 아니라 일부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산계획을 새로운 대고조의 요구에 어긋나게 낮게 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4)</sup>

3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137쪽.

3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제논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423~441쪽 참조.

34)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77~181쪽.

‘검덕광산에 간 수정주의 분자’는 물론 갑산파의 거두 박금철이었다.<sup>35)</sup> 따라서 이 글은 곧 갑산파 적어도 박금철이 가치법칙적용연구그룹의 대표적 인물임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sup>36)</sup>

당시 황해제철소와 그밖의 몇 개 공장들에서는 수정주의에 물젖은 어느 한 일군의 지시 밑에 ‘가화폐’ 제도가 도입되고 있었다. 가화폐란 문자 그대로 가짜 돈이며 그 제도란 날마다 노동자들에게 그날 계획 수행에 따르는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가서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돈에 얽어매 놓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이었다 ... 바로 이러한 때 가화폐 제도의 수정주의적 본질과 그 위험성을 즉시 예리하게 간파하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주체 56년(1967년) 4월 어느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 김정일 동지의 보고를 들어 보면 황해제철소에서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인다고 하면서 ‘가화폐’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고 물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이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려고 조작하였던 ‘가화폐’ 제도는 즉시 철폐되었다.<sup>37)</sup>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가화폐 제도를 실험한 ‘가치법칙연구그룹’의 죄행이 폭로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67년 4월이었다는 점이다.

3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305쪽.

3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395 ~ 396쪽.

여기서 언급되는 반당 수정주의자들의 죄행은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없애고, 사상혁명이 물질의 1차성에 관한 유물론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일당백”의 구호를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실 갑산파들이 제기해 온 주장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 자들은 ... ‘가치법칙’을 운운하며 ‘가화폐’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함으로써 갑산파의 숙청이 곧 가치법칙적용연구그룹의 가화폐 실험과 밀접히 연관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37)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183 ~ 184쪽.

그것은 갑산과 숙청이 본격화된 그 해 5월과 정확히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갑산과 숙청의 한 배경은 바로 이처럼 가치법칙의 무분별한 적용과 가화폐 제도를 실험한 가치법칙연구그룹의 수정주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숙청 과정과 이론적 대응 과정에 김정일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 때문에 갑산과 숙청과 후계구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하간 김정일이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김정일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당내 반대파들의 경제 주장은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과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대한 반대

둘째, ‘높은 속도’에 대한 반대

셋째, 천리마운동에 대한 비판<sup>39)</sup>

넷째, 대안의 사업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업소 관리에 대한 자본주의적 방법의 도입

다섯째, 가치법칙 활용의 강화

앞에서 본 연구는 북한식 경제 발전론인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 노선이 두 개의 발전 단계를 걷는 것이고, 그것의 2단계에서

38)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1967),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4~237쪽.

39)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또한 확인해 주는 사실이다.  
 “천리마로 달려 나가자고 하는 검덕광산에 찾아가서, 그곳 로동자들을 모아 놓고 힘들게 많이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알맞춤하게 하라고 하면서 당에서 하라고 한 것보다 광석 생산계획을 제멋대로 절반으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계속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1968),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329쪽.

는 자립경제론의 전제 하에서 원료, 연료 등 노동 대상 생산의 속도를 높이는 불균형의 자립체제<sup>40)</sup>를 확립하지는 견해와 노동수단 생산의 지속과 소비재 생산의 강화라는 균형화의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2단계의 시기가 1960년대 중반이었고 김정일이 지적인 5개 사안이야말로 이 시기, 즉 2단계 시기, 발전론의 모색에서 벌어진 정책 이견과 갈등의 쟁점이었던 것이다.

이 갈등 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길은 자립과 '높은 속도'였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는 경제논리보다는 유일사상체제와 수령제의 확립을 동반한 조직적 동원전략인 '적극적 균형'론이었다. 결국 이 논쟁의 결과, 시장조정기제의 심화가 아니라 현물적 균형관의 정립과 관료적 조정기제의 심화를 동반하는 정치적 구심의 강화라는 대안이 채택된 것이었다.

## 2)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와 안티(anti) 시장조정기제

북한은 1964년 3월 내각 결정 제21호 “인민경제 계획화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계획의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였다.<sup>41)</sup>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즉 기관과 지방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부문별 기관과 지방에 속하지 않는, 즉 기존의 국가 행정관료 조직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외적 통제기구를 설립한 조치였다. 기존의 부문별 생산기관 계획 부서들과 지

40) 이같은 자립의 발전과정을 잘 그려 주고 있는 글은 립현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 1호(2000), 5~8쪽.

4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157쪽.



방기관 계획 부서들을 그대로 둔 채,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구 계획위원회(18개)와 시·군 계획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었다.<sup>42)</sup>

이에 따라 성, 관리국, 도 인민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등 각급 기관과 기업소의 계획 부서들은 기존의 부문별 해당 소속 기관과 아울러 신설된 별도의 국가 계획기관에 이중으로 종속되어 운영되게 되었다.<sup>43)</sup> 이렇게 신설된 ‘지역별’ 국가 계획기관은 국가적 요구와 이익을 우위에 두고, 성 계획국, 기업소 계획부 등 해당 지역과 부문에서의 계획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sup>44)</sup>

이제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생산자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 소극 보수성을 극복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가 계획기관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여 계획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sup>45)</sup>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어느 한 개별 기업의 현물 지표별 계획 차질은 그와 연관된 다른 기업의 계획 차질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계획을 파탄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1964년의 일원화 계획 체계가 주인 -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사실상 정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생산의 완벽한 연계를 실현하는 데

---

42) 편집국,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 『근로자』 제7호(1968), 42쪽.

43) 高昇孝, 『現代朝鮮經濟入門』(東京: 新泉社, 1989), 이대섭 옮김, 『현대북한 경제입문』(서울: 대동, 1993), 224쪽.

44) 김일성, “인민 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202쪽.

45) 편집국,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 47쪽.

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개별 기업의 계획 차질로 인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확산되는 사회적 분업체계의 혼란과 자재 수급의 불균형은 일정 정도 팽창된 사회주의 경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당시까지 동구나 소련의 사회주의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기 시작한 분권론적 시장조정기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이전 소련에서 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여려는 징후는 벌써 196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끼예브의 한 경제학자에 의하여 제창된 사회주의 경제도 ‘리윤본위’의 원칙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수정주의적 이론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리벨만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수정주의 이론의 골자는 리윤을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며 국가가 기업소에 내려보내는 계획지표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리벨만 이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화폐 관계와 가치법칙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는 수정주의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이론이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거부하고 리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려는 반동적인 이론이었다.<sup>46)</sup>

당시 동구나 소련의 이윤 개념과 경제적 분권화론의 도입을 반대한 김일성은 그와는 정반대의 균형화 조치, 즉 부문간 연계균형의 세부화를 극도로 강조하는 유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1965년 9월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에서 김일성에 의해 도입된 계획의 세부화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즉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부속품이나 양이 적고 소소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들을 국가 계

---

4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177쪽.

획 안에 포괄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현물 지표별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세밀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제 큰 지표에서부터 작고 소소한 세부 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빠짐없이 다 국가 계획으로 지표화되어 법적 의무성이 강화되었다.<sup>47)</sup>

일부 사회주의 경제에서 추구한 시장조정기제의 심화, 즉 부문 내부의 세부 균형을 가치법칙에 의해 조절<sup>48)</sup>하고자 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이처럼 ‘세부화’ 조치를 수립하여 강제 집행력과 법적 의무를 동반한 초유의 관료적 조정기제의 수립으로 맞섰던 것이다.

결국 경제계획의 일원화 체계가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계획 수립의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그 출발부터 안티(anti) 시장조정기제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가 ‘주인 - 대리인’ 문제와 정보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었다. 실제 계획의 세부화를 지향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현물지표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를 잘 보여 준다. 실상 현장에서는 현물지표와 금액지표가 동시에 주어지고, 현장 지도부는 현물지표를 미달하더라도 여전히 금액지표를 수행함으로써 면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 지도부의 선택에 나타난 경제적 동기보다는 그 정치적 의도를 읽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국제 사회주의의 흐름을 수정주의로 규정하는 북한의 단호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독해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1969년 북한 체제가 다시 한 번 입장 변화

47)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252쪽.

48) 박경옥, “리운 본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옹기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52쪽.

를 표명하는 또 다른 동기였던 것이다.

### 3) 가치법칙의 '형태적' 적용 테제와 시장조정기제의 부분적 복권

가치법칙<sup>49)</sup>은 상품화폐 관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장관계의 다른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같은 상품생산법칙이 사회주의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은 1952년에 가서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때에 스탈린이 비로소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sup>50)</sup> 따라서 이 때부터 소비재에 관해서는 가치법칙이 작동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국유기업의 사기업화라는 형용모순을 어떤 체제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즉 국가소유 형태 내부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성 여부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물론 생산물 균형의 규제체제로서의 직접 사회적 방식, 즉 관료적 조정이 아닌, 간접 사회적 방식, 곧 시장조정기제의 활용 범위와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sup>51)</sup>

쉽게 말해 국유 하에 있던 생산수단 생산 부문에서 생산물과 노동자

49) 이하는 가치법칙에 대한 복한의 설명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법칙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상품생산의 법칙, 교환의 법칙이다 ... 상품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은 상품생산자들의 이해관계의 반영이며 그를 평등하게 실현시키는 조건으로 된다 ... 이러한 등가성의 원칙은 상품 교환뿐 아니라 생산 과정도 규제한다 ... 따라서 가치법칙은 상품 생산과 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 등가교환의 경제법칙이다. 등가성의 원칙은 상품가치에 기초한 가격을 통하여 관철된다.” 김명렬, 『사회주의 하에서 물질적 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02 ~ 103쪽.

50) J. V. Stalin(1952),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First Edition, 1972), pp. 19 ~ 25.

51) 신현준, “1960 ~ 70년대 초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논쟁의 재검토 - 짜골로프 논쟁을 중심으로”, 『현실과 과학』, 5호(1990), 192쪽.

들의 노동이 과연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가 중요해진 것이다. 여기서 가치법칙이 작용한다는 논리는 곧 시장관계의 전면화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었고 그것은 곧 시장조정기제를 전면화하자는 논리에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갑산파와의 논란을 겪으면서 북한 체제가 관료적 조정기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한 마당에 가치법칙과 시장조정의 강화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수정주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미미하였다.

북한 지도부가 이상의 논쟁을 종결짓고 가치법칙에 대한 나름의 이론화에 성공한 것은 1969년에 가서였다. 1969년 김일성은 이 시기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sup>52)</sup>라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북한 가치법칙 규정의 절대 초석을 놓는다. 여기서 김일성은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그리고 생산수단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 가치법칙이 작용하는가라는 사회과학자들의 질문에 무려 1년이나 지나서 답변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답변할 여가가 없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에 관한 국내외의 격렬한 논쟁이 그

52)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 495~521쪽.

이미 보았지만, 사실 김일성은 이 논문에서 가치법칙뿐만 아니라 ‘속도 - 균형’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내린다. 여기에서 ‘속도 - 균형’ 문제를 더 중시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속도 - 균형’ 논쟁과 가치법칙 논쟁이 모종의 연관성을 지니고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은 이 시점에 가서 속도 - 균형론과 가치법칙에 대한 최종 정식화를 하였지만 속도 - 균형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김정일이 그 이전에 정식화를 해 놓았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 실린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 데 대하여”(1967)나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1967) 등의 글에서 이미 1967년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1969년 글에 실리는 정리들을 담화로 발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가치법칙에 대해서는 1969년에 가서 김일성이 언급하고 정리한 것이 모두이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실상 갑산파의 투쟁에서 김정일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은근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점이고, 이 점에서 갑산파 속칭이 후계논쟁과 맞물려 있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본 논문에서 김일성이 규정한 사회주의에서의 상품 - 화폐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품생산이 진행되려면 사회적 분업이 있어야 하고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어 있어야 하는바, 사회주의에서도 상품생산은 있지만 그것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 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이용된다.

상품은 소유자가 달라질 때, 즉 ①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소유 이전시, ② 협동농장들 사이나 생산협동조합들 사이 혹은 상호간 소유의 이전시, ③ 국가간 무역시 생산수단은 명백한 상품이다. 따라서 국가 기업들 사이에 유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상품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 기업들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물은 상품적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가치형태를 경제 계산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과도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에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남아 있고 노동이 생활상의 1차적 요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등가계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르면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비록 상품이 아니지만, 형태적으로 가치형태를 띠기 때문에 가치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sup>53)</sup> 결국 북한에서 가치법칙은 몇 가지 원칙<sup>54)</sup> 하에서 활용되고 이용

---

53) 사실 이 경우 북한의 생산수단이 가격공간을 활용하고 따라서 형태적으로 가치법칙이 작용한다는 주장은 내용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형태적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즉 생산수단을 자유매매의 원칙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유통을 도매시장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되는 것으로 정식화되고,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기본법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것도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의 균형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가치법칙을 축

---

만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이고 계획적 지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3호(1999), 7~8쪽.

한편 생산수단의 거래가 상품적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은 계약이 완전 자유계약이 아니라 계획에 기초한다는 점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기업소간 계약이 국가소유의 자재상사에 의해 조절 통제된다는 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자재상사가 공급자 기업소로부터 사서 수요자 기업소에 판매하기도 하고 연합기업소의 경우 자재상사의 주선 하에서 연합기업소간에 계약을 맺고 이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재상사가 없어지고 계약관계가 전면화되는가 하는 것은 북한 체제 동학의 중요한 관찰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적 이용테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화폐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경우 무현금 거래에 의거하는데, 무현금 거래라는 것은 사실 은행 돈자리상의 장부상의 문제일 따름이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돈자리를 결제하는 것으로 계산을 갈음하기 때문에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와의 교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소비재)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이며, 무현금 유통은 기관·기업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수단의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서울: 한국은행조사국, 2000), 4쪽, 38쪽.

한편 상품은 ‘유통’ 관계에 놓여 있는 반면, 상품적 형태는 ‘공급’ 관계로서 마치 군대에 보내는 무기처럼 가치의 실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의 직접적이며 현물적인 보장이 기본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은 김명렬, 『사회주의 하에서 물질적 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 98~99쪽.

- 54) 리명서,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 유수복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경제학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123~126쪽.

첫째,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낡은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던 상품유통과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를 끊임없이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내재적 본성(경쟁과 자연발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관재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상의식을 높여 주며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넷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소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하는, 따라서 시장조정기제의 심화와는 거리가 먼 것임이 분명해진다. 뒤에서 보겠지만 비록 1969년의 논문이 이전 시기에 비해 시장조정기제를 허용하는 폭이 넓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균형화는 여전히 개혁 사회주의 일반에서 이해되고 있던 분권화나 시장조정기제의 심화 과정으로 쓰여지지는 않고 있었다.

#### 4. 결 : 관료적 조정과 시장조정기제의 역사적 부침

1960년대 사회주의 진영 전체는 경제 발전의 정체를 경험하면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와 경제조정기제를 둘러싼 발전론의 재해석 작업에 돌입하였다. 북한 역시 어떤 식이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점에 북한의 지도부가 취한 문제해결 방식이 바로 ‘속도’와 ‘적극적 균형’이라는 동원의 논리였던 것이다. 1965년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처를 필두로 일색화되기 시작한 관료적 조정기제는, 이와 동시에 출현한 수령제와 함께 거침없는 조직정비를 통해 완벽한 관리의 경제를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 수령제는 경제관리에서 조직논리의 우위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령제는 경제관리 영역에서 일상화(routinized)되어 가고 있던 중간관리층보다는 현장 생산노동자들과의 직접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보수적 중간 관리층을 재혁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생산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 엘리트로 양성, 대중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경제조직화와 과도한 계획화(rout planning)는 현실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현물지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곳곳에서 불멘 소리들이 터져 나왔고, 경제는 의도한 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결국 경제 관리에서의 절충적 정책의 도입이 도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자신들의 중앙집중제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자체로 탁아소를 만들거나 버스 정류장에 의자 하나 설치할 수 없었으며, 여관도 수리하지 못하고 상점 하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으며, 다리 하나 놓을 수도 없었다.<sup>55)</sup> 1969년에 이르러 김일성은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에 권한을 줄 것을 조금씩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의 논문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sup>56)</sup>에서 비쳐진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 테제 역시 겉으로 보이는 논리와는 달리 그 실상은 가치법칙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단의 고민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었다.<sup>57)</sup> 그같은 변화는 1971년 6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sup>58)</sup>나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5기 7차 전원회의 등의 연설<sup>59)</sup>에서

55)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567쪽.

5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 495 ~ 521쪽.

57)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542 ~ 543쪽. 여기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물질적 자극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가격공간 이용을 도외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헌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일성은 당 문헌을 주어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문헌의 중요한 내용이 사장되고 있음을 답답해하고 있다.

58) “1971년 계획을 세울 때에도 올바른 방법론을 세우지 못한 채 계획지표수를 종전의 3,000종으로부터 수만 종으로 지나치게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 및 도급 기관의 계획 일군들을 계획작성 사업에 널리 인입할 대신 그들을 제쳐놓고 기업소별로 소소한 세부 물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직접 맞물리는 방법으로 계획화 사업을 함으로써 수십 배로 늘어난 업무량을 미처 처리하여 못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

계속 나타나면서 기존 경제동학의 과도한 집중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1969년은 북한 체제가 1964~1965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관료적 조정과 현물동학적 체제운영 원리를 연성화하기 시작한 해였고, 그것은 그 동안 가격동학적 기제를 억제하고 공산주의화를 다그쳐간 편향에 대해 북한식 절충을 시작한 해로 볼 수 있다.<sup>60)</sup>

요컨대 1964~1969년기의 북한 체제가 선택한 것은 극단적인 현물경제관에 입각한 관료적 조정기제의 심화라는 대안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순수한 경제논리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우선성에 의거한 것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중소분쟁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수정주의에 대한 대응 논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고해지기 시작한

---

는 종합적인 균형을 틀어쥐고 맞추어 나가는 데 힘을 들이지 못하였으며 계획작성 사업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주체 60년(1971년) 6월 28일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 주시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196쪽.

물론 이 연설에서 김일성이 주로 강조한 것은 지표분담체계 문제였지만, 위의 인용문은 명백히 1965년도 김일성의 연설[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196~211쪽]에서 내린 교시, 이를테면 계획화 수치가 몇 만 종이라도 상관없다든지 시일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든지 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59) “한동안 가치법칙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되게 비판하였더니 독립채산제, 작업반도 급제, 분조도급제가 다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의 하나는 생산계획을 자재 보장보다 높이 주기 때문에 계획을 미달하는 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 자극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249쪽.

60) 현물 동학이라 함은 수량신호체계(quantity signal)에 따라 움직이는 탈화폐의 경제동학을 의미하고 가격 동학이라 함은 초보적으로는 루블에 의한 통제나 제2경제 현상을 나아가 조금 더 고급화하면 랑계 이래의 시장사회주의론이 시도한 계획-계량(planometrics)의 사회주의에서의 shadow price에 의한 일반 균형의 동학을 의미한다.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계”, 18~29쪽 참조.

때에 관료적 조정기제가 경직성을 벗고 유연화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1969년은 1964년 이래의 극단적인 관료적 조정기제가 시장조정기제를 한정적으로나마 복권시킨 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높은 속도 - 적극적 균형’,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 테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함 없는, 그래서 독창적인 이론으로 인정되는 테제이다. 그것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중공업 우위 노선의 지속과 경제조정기제에서 시장조정기제의 ‘형태적’ 활용을 이론적으로 접맥한 것이었다. 그같은 접맥이 북한 체제의 불균형 성장과 관료적 조정기제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1964~1969년기의 중공업 우위와 극단적으로 일색화된 관료적 조정기제로부터는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었다.<sup>61)</sup>

---

61) 1964~1969년기를 가장 극단적인 관료적 조정기로 보고, 1969년 논문을 그 연성화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는 1964~1969년기를 혁명체계로 보는 현승일의 견해와 동일하다. 그 역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극단적인 혁명체계로 보고 있다. 현승일, “북한 산업경영체계의 전개 -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논총』 5권 1호(1985), 137~147쪽.

## 참고문헌

<1차 자료>

김명렬, 『사회주의 하에서 물질적 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의 몇 가지 이론문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2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원국, “사회주의 상업기업소 독립채산제의 특성”, 『경제연구』, 1호 (1991).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 9. 23),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1968. 5. 11),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 여”(1969. 6. 30),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1969. 3. 1),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2차 7개년 계획 작성 방향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1967. 6. 13),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1967. 6. 15),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명서,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 유수복 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경제학』, 제2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6).
- 리종만, “사회주의 상업에서의 주문제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호(1990).
- 림현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 1호(2000).
- 박경옥, “리운 본위를 배경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옹계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호(1996).
- 양호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 실현의 특성”, 『경제연구』, 2호(1991).
- 주형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아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호(1994).  
편집국,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 『근로자』,  
제7호(1968).

<2차 자료>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 들녘, 2001).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33집(1997).

\_\_\_\_\_,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체제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31  
호(1999).

신현준, “1960~70년대 초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논쟁의 재검토-짜콜로  
프 논쟁을 중심으로”, 『현실과 과학』, 5호(1990).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현승일, “북한 산업경영체계의 전개-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은  
총』, 5권 1호(1985).

Davis, Christopher, and Charemza, Wojciech, “Introduction to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model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eds.),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London :  
Chapman and Hall, 1989), pp. 3~25.

Eckstein, Alexander, 김기훈 옮김, “개발전략과 경제정책”, 이병주 편, 『현  
대중국론』(서울 : 청람문화사, 1984).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New Haven : Yale  
Univ. Press, 1958), 김만제 옮김, 『현대경제경영대전집 25-경제  
개발의 전략』(서울 : 서음출판사, 1981).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Univ. Press, 1992).

Stalin, J. V.(1952),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First Edition 1972).

Wilczynski, J.,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0), 배연수 옮김, 『사회주의경제학』(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Abstract>

##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Debate over the Economic Coordination Mechanism in 1960s.

Lee, Jeong-Cheol(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olitical Science)

Since the power struggles in 1956, Kim Il-Sung established a forced growth system which core expression wa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self reliance and building of heavy industry simultaneously with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At its initial stage, a Soviet-styl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is mad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possible. But it was a matter of course that once the economic growth rate slowed down and economic situation became aggravated, the masses and their political spokesmen, the technocrats, complained about the grand principle of the heavy industry oriented and self-reliant forced growth strategy. Accordingly, North Korean regime strove to meet their needs and get through serious crisis by continually reinterpreting its development strategy and by suggesting a blue print to the masses.

In the 1960s, North Korea also encountered a phase of turbulence surrounding the fu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Faced with the overall



economic decline in the Socialist countries, the so-called “rapid economic growth strategy versus equilibrium strategy” controversy(i.e., which strategy to prioritize and what coordination mechanism to use) and following a power struggle emerged. Liberman’s reform theory, which was widely accepted by Socialist countries at that time,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an emphasis on the latter, thereby focusing on market coordination.

This struggle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centralized bureaucratic coordination mechanism and the revolutionary organizing theory call the “*Suryong* system”. The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settled in 1964, featured a special emphasis on detailed devices and bureaucratic control over the production of physical materials.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ystem meant that North Korea chose to oppose the reformist theory that tended to lean toward the market coordination mechanism.

Thereafter, “revolutionary organizing theory” became an unshakable principle i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the bureaucratic coordination mechanism and taut planing system(i.e.,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began to soften. Thus, under the theme of the 1969 resolution that allowed the law of value to function, the control of perfection system loosened.

Even today, the existing theory of “rapid economic growth” is, in fact, a political discourse resulting from the 1967 high-cost power struggle. However, the real economic implication of the discourse has changed many times, causing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to be readily misunderstood.

Keywords : The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bureaucratic coordination mechanism, Liberman, development strategy, equilibrium, forced growth strategy, control of perfection.